

독일의 테러대응책과 우리의 방향

A Study on way of Korea and measures Counter-Terror of Germany

권정훈

경산대학

Kwon jeong-hoon

Gyeongsan University College

요약

우리나라는 외국인 출입국자와 불법체류자의 증가에 따른 출입국시스템의 강화와 인터넷의 영향으로 인한 이슬람 과격단체, 홈그라운(homegrown) 테러리스트 그리고 북한의 도발행위 등 테러대책의 역점을 두기 위한 종합적인 접근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컨트롤 타워'와 '인터넷 테러 감지 센터'의 설립으로 관계기관간의 네트워크화가 필요할 것이다.

I. 서론

9·11테러 이후 국제연합은 각국에 포괄적인 테러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한 바, 선진국에서는 자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법적토대를 마련하면서 테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주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국제적 조류에 따라 실정법을 비롯하여 관계기관들은 나름대로의 대책을 수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테러조직의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독일은 과거 1970년대 서독일 적군파(RAF) 등 테러의 속출로 인한 역사적 경험과 9·11테러를 계기로 「국제적 테러리즘의 대책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협동테러방지센터(GTAZ)'와 '협동인터넷센터'를 설립하면서 관계기관간의 네트워크화를 통해 테러대책에 역점을 두고 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철저히 보장하는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법치국가인 독일을 소개하는 것은 테러대책 마련을 위한 우리에게 커다란 시사점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독일의 테러대응 정책 변화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살펴본 후,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독일의 테러대책에 관한 검토

1. 경찰과 정보기관의 예방 및 권한

우선, 독일은 3개의 독립 경찰조직이 있다. 첫째, 연방형사청(BKA)은 대외 관계의 센터로, 국제 협력을 관할하며, 해당 지역의 주나 연방의 여러 부국에 대해 지체 없이 정보를 제공하고, 상호 이해를 근본으로 활동하고 있다. 둘째, 연방경찰국(BPOL)은 공항이나 항만에 있어 국경 경비를 실시, 철도공로해로의 치안을 담당한다. 셋

째, 관세수사국(Zollkriminalamt: ZKA)은 국경을 넘는 상품이동에 관해 EU법을 근거로 권한을 행사하며 자금 세정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3개의 정보기관이 있다. 첫째, 연방정보국(BND)은 국외정보를 둘째, 연방헌법보호청(BfV)은 국내정보를 담당하고 셋째, 군정보국(MAD)이 있다. 정보기관이 감시대상인 인물이나 단체에 대한 강제권의 집행은 불가능하다. 다만, 현재 감청에 관해 협력의무를 지닌 통신사업자에만 강제권 집행이 가능하다.

2. 국제 테러리스트의 위협

오늘날의 테러 위협은 과거와 달리 테러리스트는 최신의 모든 정보통신기술을 구사하고 있다. 휴대전화, 노트북, 인터넷 카페를 이용하고, 공통의 이메일 계산을 따라 정보에 접근한다. 데이터는 암호화하며, 인터넷 서버에 보관한다. 브로드밴드가 현저하게 보급된 것도 또 하나의 문제이다. 경찰의 수사로 판명하는 데이터양은 기존의 보존용량을 능가하고 있다. 그리고 IP전화의 중요성도 늘어나고 있다. 독일의 통신 사업자에 따른 고정전화를 대신해 국제적인 통신 사업자가 운영하는 암호화된 IP전화가 늘고 있다. 감청은 IP전화와 그 기술적, 조직적인 복잡성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3. 테러대책을 위한 수단

3.1 테러대책입법

9·11테러 이후, 최초의 테러대책입법이 2001년 연방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이를 통해 형법 제129조 b가 새롭게 시행됨에 따라 국외의 테러리스트에 대한 형사소추의 법적기반이 구축되었다. 더욱이 테러대책입법에서는 결사법이 개정되어 과격파조직은 종교로 위장해 위법한 목적

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1차 테러대책입법에 이어 2002년에는 국제적 테러리즘 규제를 위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이는 2차 테러대책입법으로, 주된 목적은 치안 관련 기관들이 테러 활동의 준비단계를 가능한 한 조기에 발견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형법 제303조 b에 의거, 컴퓨터 사보타지에 대해서는 BKA가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되었다.

3.2 래스터수사

래스터수사는 데이터베이스를 집약하여 그물모양으로 조사하기 위해 개발한 기법이다. 이는 특정인물이나 집단을 공공 혹은 민간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하고, 지표를 토대로 수사 대상이 되는 인물을 특정 짓는 기법으로, 종래의 수사와는 달리 목표가 되는 인물이 분명하기 때문에 표시하는 인물의 집단 범위를 한정해 나가는 접근방법이다.

3.3 감청

경찰과 정보기관은 형사소송법상의 규정에 의거, 감청이 가능하다. 형사소송법 제100조a는 어느 인물이 가해자 혹은 공범자로서 중대한 범죄를 범했는지 또는 범죄를 판단하는데 있어 그 외의 수단으로는 사실관계의 조사가 곤란한 경우 당사자에게 통보 없이 통신의 감청과 녹음이 가능하다.

Ⅲ. 독일의 테러대책이 우리에게 주는 함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은 경찰 및 정보기관만으로 테러대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테러대책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접근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테러의 네트워크에 대한 각 기관들의 한계를 넘은 정보, 분석, 전략 등의 네트워크에 따라 접근해야 할 것이다.

독일은 종합적인 접근의 모색으로 테러 관련 관계기관 간 네트워크의 중심적 역할을 위해 베를린에 'GTAZ'를 설립하였다. 동 센터는 이슬람교 관련 테러 현상을 담당하는 각 기관의 협력체제에 대한 분석과 작전을 개선하기 위해 2004년 치안당국의 새로운 협력포럼으로서 설립되었다. 동 센터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위협 시나리오의 조기발견이다. 이 정보에 대한 네트워크의 중심이 되는 요소는 관계 각국에 의해 매일 공동으로 이루어지는 정보교환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테러조직의 표적이 되고 있고 실제로 국내에서 탈레반 조직원이 검거되거나 무슬림이 지하드 선동행위로 검거되는 사례도 발생하였다. 또한 테러자금 모집을 위해 탈레반과 연계된 해외 테러세력들로 인해서 더 이상은 테러의 무풍지대라고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컨트롤 타워'의 설립이다. 컨트롤 타워의 핵심은 통합적인 정보수집 및 평

가 그리고 정보의 공유에 초점을 맞추는데 있다. 컨트롤 타워가 설립된다면 출입국시스템이 보다 강화되어 국외의 테러조직은 물론 국내에 암약하고 있는 불법조직들을 가일층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터넷은 테러조직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테러조직은 그들의 목표를 위해 네트워크를 구성, 조합하여 네트워크 전쟁을 승리로 이끈다[1]. 또한 오늘날 테러조직은 네트워크 형태로 진화했고, 이 테러 네트워크는 선호도 결합(perferential attachment)에 의해 결과된 Scale-free 네트워크의 형태를 띤다[2].

독일은 인터넷상의 과격 행동이나 테러활동에 관련된 정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인터넷을 감시하고 분석하는 기관으로 '협동인터넷센터'를 설립하였다. 동 센터는 지금까지 분산되었던 관계기관에 따른 각 전문능력이 집약되어 영어, 독일어, 아라비아어, 터키어, 쿠르드어, 파슈툽어, 우르두어 등의 인터넷사이트를 감시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도 사이버테러 대응체계는 구축되어 있으나 이들의 주요 역할은 각종 바이러스에 대한 국가 정보통신망 보호 내지 불법문건, 불법사이트 등의 감시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기존의 사이버 관련 센터들과 테러 관계기관들 그리고 재외공관과의 공조체제를 통해 이들에게 인터넷사이트를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직접적인 테러활동에 관련된 정보 상황을 감시하며 분석하는 인터넷상의 테러 관련 감시 센터를 설치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테러 네트워크 관계망의 정보 흐름을 통제함으로써 자금세정과 테러조직의 자금수집 등을 방지할 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 문헌 ■

- [1] 장기봉 "뉴테러리즘의 등장과 이에 대응한 국가 네트워크 전략",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3-4, 2007.
- [2] 윤민우, "테러네트워크의 이해와 전략적 접근방안", 한국테러학회 추계공동학술대회 자료집 p.97, 2010.